



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서적에 대해서는 당신들의 하수인인 치안 본부 대공 분실에서조차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을 지정입니다. 압수된 5대의 컴퓨터는 사건 보도를 위한 훌륭한 배경 역할을 했으며 이제 본인들에게 되돌려져야 합니다. 기계에 대해 이상할 정도의 두려움을 갖지 않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컴퓨터는 그저 기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야말로 중요한 증거와 비밀들이 채워져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디스켓을 열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족 및 방청객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두 발을 딛고 당당히 설 수 있음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공동 투쟁에 힘입은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후원자이며, 현정권과 국가 보안법을 규탄하는 이 자리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으로 여러분의 역할을 끝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투쟁의 소식, 우리의 주장을 노동자에게 가져 가십시오. 이 땅의 양심들에게 가져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투쟁하십시오. 그러면 어느날 투쟁의 전선 한가운데서 우리와 손을 맞잡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민주 노동자 일동**  
(안양 PD 그룹)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와  
노동자 정당 건설을 향하여**

I 안양 민주 노동자 일동(김학원 : 항소 이유서 중에서)

II 반제 반파쇼 민중 민주주의 혁명론(김학원 : 항소 이유서 중에서)

## 안양 민주 노동자 일동 (안양 PD 그룹)

### ◇활동 개요◇

1988년부터 1989년 상반기의 투쟁을 거치면서 제기된 전국적 노동자 정치 조직 건설 과제를 안고, 안양·군포 등의 사업장에서 해고된 활동가들이 1989년 4월부터 구속된 9월까지 1차적으로 정치 조직 건설의 올바른 경로 및 필요성을 선전하기 위한 연구 토론 활동을 하였다.

내용으로는, 노동자 정치 조직은 왜 필요하고 올바른 건설 경로는 어떠한 것인가, 노동자 대중 조직과 정치 조직은 각각 어떠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서로 어떤 연관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는가('노동자 계급의 올바른 당 건설 경로에 대하여 : 초안) 등의 연구 및 시기와 사안별로 지역 유인물('메이데이 100주년 기념 한국 노동자 대회에 부쳐', '현정세의 성격과 민족 민주 운동의 과제', '경기 남부 지역 임투 평가' 등)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 ◇사건 개요◇

검찰 발표에 따르면 "1988년말부터 1989년초까지 '반제 반파쇼 민중 민주주의 혁명' 노선으로 사상 무장을 하고 안양·군포 지역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계급 투쟁을 선전·선동하여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안양 민주 노동자 일동 그룹'이라는 이적 단체를 구성하여 불법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이 지역 476개 기업체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조직 확대 및 노동 쟁의를 배후 조종하고,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였다."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갖은 고문·협박을 통해 작성된 자술서를 그대로 베낀 공소장을 작성, 1989년 9월 13일 김학원 등 6명을 구속시켰다.

### ◇약력◇

· 김학원(29)

- (주) 영흥 해고 노동자. 징역 2년·자격 정지 2년. 대전 교도소 수감중
- 김 혁(27)  
징역 2년·자격 정지 2년. 진주 교도소 수감중.
- 김대영(29)  
전노협 쟁의국. 징역 8개월·자격 정지 10월.
- 이숙희(27)  
판검사 구속 기간 연장 사건으로 석방.(1989.10.20)
- 이성호(27)  
징역 1년·집행 유예 2년
- 이기동(26)  
징역 1년·집행 유예 3년

### ◇명칭에 대하여◇

'안양 민주 노동자 일동'이란 안양·군포 지역 노동자들에게 민중 민주주의에 입각한 제반의 투쟁을 모아내기 위해 몇몇 유인물에 밝힌 이름이다. 즉 안양

지역의 반제 반파쇼 민중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이념에 입각한 정치 조직의 공식 명칭이 아닌, 이를 지향하는 과정에 있던 소그룹, 서클로 존재하면서 광범한 민중 민주주의 대오를 통칭한 것이었다.

그러나, 치안 본부와 검찰의 사건 조작, 왜곡은 서클 수준의 조직을 거대한 지하 조직으로 격상시켜 놓았다. 즉 이 이름 자체는 이러한 왜곡, 조작에 의해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이나, 안양·군포 등 경기 남부 지역 노동자들의 민중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대오를 구축하는 데에 '안양 민주 노동자 일동'이란 이름은 이제 우리의 지난, 활동을 칭하는 의미로 생각하여 우리의 본의로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 I. '안양 민주 노동자 일동'

## —선진 노동자의 이름으로

### 1. 머리말

#### 1) 선진 노동자의 이름으로

깨어 있는 노동자, 앞서가는 노동자인 선진 노동자는 우리 시대의 희망입니다. 일천만 노동자야말로 수십 년 간 이어져온 굴욕적인 폭압적 독재 통치를 끝장내고 4천만 민중들의 열망인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유일한 선진 계급이며, 바로 이 일천만 노동 계급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나가는 자가 바로 선진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진 노동자는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시켜 나가는 노동 해방·민중 해방의 전망 아래 그를 위해서는 민중 스스로 독재 정권을 끝장내고 스스로 주체가 되는 민중 권력을 세워야 한다는 기본적인 임무를 잊지 않습니다. 또한 현실의 주요 과제인 전노협외 역량 강화와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뛰어다닙니다. 노동자부터 대중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히 이러한 어려운 직책이자 명예로운 호칭인 선진 노동자의 이름으로 이 글을 씁니다.

명예로운 호칭인  
선진 노동자의  
이름으로  
이 글을 씁니다.

독재 정권과  
독점 자본의  
반민중적인 횡포는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옥중이라는 고립된 조건과 소송 서류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가는 동지들의 이름을 빌리고자 하는 것은, 비록 상황과 조건이 열악할지라도 노동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우리들의 활동, 즉 전노협의 역량 강화와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을 위한 활동이 멈춰지거나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작금의 현실의 엄중함 때문입니다.

진실로 작금의 현실은 냉엄하면서도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90년에 들어서도 기층 민중의 생활은 임금 인상 억제, 농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 등 독재 정권과 국내의 독점 자본의 반민중적인 횡포가 강화되면서 더욱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독점 재벌들의 토지 독점과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세 폭등으로 민중의 생존권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승하는 주거 비용을 감당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공단 지역 근처 시장터에서 몇 푼 안되는 임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노동자의 아내들이 김치 한 포기 담그는데 하루 일당보다 훨씬 웃도는 일만 원이 날아간다고 아우성칩니다. 또한 국내의 독점 자본이 강요하는 수입 개방과 저곡가를 실현시켜 주기 위한 자본주의적 영농 정책으로 인해 부농을 제외한 대다수 농민들은 애써 키운 농작물들을 스스로 뒤엎어 버리고 자신들의 터전을 상실당한 채 빈농으로, 도시의 일용 노동자로, 노점상으로 전락하여 더욱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가와 독재 정권의 폭압적 통치 아래서 국민의 대다수인 민중이 겪어야만 하는 고통이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갈수록 절박해가는 민중의 생활상은 지어내거나 과장된 것이 아닌, 이들이 숨쉬는 공장, 가두, 토지 등 삶의 현장에서 언제라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즉, 자본과 생산 수단과 권력을 독점하는 자들은 하루 단 십 분의 노동



없이도 무한한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는 반면에, 민중은 자신들의 노동력을 공장과 가두와 토지에서 아낌없이 팔아 던지지 않는 한 목숨 부지와 종족 보존을 위한 삶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진전된 자본주의 사회의 냉엄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냉엄한 현실은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민중의 절박한 생활고 그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현실의 냉엄함은 오히려 가지지 못한 민중이 자신들의 부당한 사회적 빈곤화에 대항하여 점차 집단적, 반란적 형태로 투쟁해 나간다는 사실, 이러한 투쟁은 필연적으로 지배 권력의 탄압과 상호 충돌함으로써 권력에 대항한 정치 투쟁으로 발전한다는 사실, 더욱이 민중의 정치 투쟁은 가장 조직적인 선진 부대인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진출과 결합함으로써 지배 질서를 근본적으로 타파할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가와 독재 정권은 자신들이 지닌 권력의 모든 폭압적 통치 기구(군대, 경찰, 정보 기관, 법, 관제 언론, 감옥 등)를 총동원하여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이 자신들에 대항하는 정치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키고 탄압한다는 것과, 결국 아무리 관제 언론을 통해 노사 협조, 국민 화합이라는 허울 좋은 계급 화해주의로 현실의 적대성을 은폐한다 할지라도 자본주의가 진전될수록 자신들의 착취 지배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가와 독재 정권, 그리고 이에 대항한 노동자·민중 간의 대립 투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전세값 폭등으로 자살한 어느 영세민의 유서보다도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골리앗 농성 노동자의 절규가 우리 사회의 냉엄한 현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90년 벽두에 자유주의 부르조아 세력인 보수 야당(김영삼, 민주당 세력)을 포섭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보수 대연합

민중의  
정치 투쟁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진출과  
결합함으로써  
지배 질서를  
타파하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라는 더욱 강력한 자본가 독재 체제를 구축한 군부 세력은 민중 운동의 기수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 일정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서 진노협 및 변혁적 노동 운동 진영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천 봉쇄, 조기 공권력 투입, 체포, 구속, 테러 등 무궁 무진한 자신들의 물리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분신한 (주)통일 노동자의 시신을 탈취해 가는 과감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탄압의 현실에 대해서는 조석으로 일간지를 보고 계실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권측이 말하듯 체제 수호의 차원에서는 당연한 엄단 행위일 터이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현실의 엄중함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진출을 저지하려는 독재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과 노동 운동 진영간의 침예한 투쟁 속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때 작성되고 진행되는 항소 이유서와 항소심은 더욱 비장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행·구속 및 우리 활동에 대한 법적 탄압 역시 노동 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저지하려는 현정권의 탄압 음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동 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면 될수록 노동 계급의 정치적 진출은 더욱 진전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진리를 우리 또한 비장한 각오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천만 노동 형제들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우리들의 활동이 비록 국가 보안법의 족쇄에 채워져 유죄 판결을 받을지라도 독재의 강압된 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매도된 우리들의 활동을 노동자와 민중의 논리에 입각해 복구시키고 그 역사적 정당성을 밝히고자 항소합니다. 본인은 85년 이후 안양, 안산 등 경기 남부 지역의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활동해 온 선진 노동자의 이름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데에 모든

노동 운동은 탄압하면 할수록 노동 계급의 정치적 진출은 더욱 진전될 것입니다.

동지와 가족들, 나아가 역사와 민중 앞에 진실만을 말씀드리고자 노력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이는 지난 활동이 탄압과 왜곡에 의해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역사적 대의에 입각해 복구하고 실천적으로 평가해서 그 패배와 승리의 교훈을 각인함으로써 앞으로의 노동 운동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아나가는 것이 간절한 운동가로서의 기본 임무이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 2) 민중이 바라본 독재의 법정

“역사와 민중만이 우리를 정당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은 소위 양심수라 일컬어지는 사회 변혁적 운동가들이 독재의 법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국한된 외침만은 아닙니다. 1953년, 쿠바 혁명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는 독재자의 탄압에 맞선 법정의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시오.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 무슨 똥판지 같은 말입니까? 어떠한 명분이건간에 현재의 법 질서에 묶여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징역형(심지어는 사형까지도)이 처해지는 판국에 역사와 민중이 자신을 무죄로 선고할 것이라니. 그렇다면 법정도 두 개, 심판자도 둘이란 말입니까? “악법도 법이다”라며 악법에 충실히 살아 지배자의 논리에 동조할 것을 주장한 소크라테스의 눈으로 보면 모두 정신나간 작자들의 얼빠진 주장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한마디로 자신의 사회 변혁적 활동을 기존의 지배 질서를 유지하려는 수단에 불과한 법의 이름으로 구속하고 심판할 수 없다는 역사적 경고인 것입니다. 낡은 독재의 지배 질서를 타파하고 민중의 이해와 역사 발전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낡은 질서에 근거한 법으로 심판해서야 되겠습니까! 더욱이,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대변하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시오.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는 모든 민중 세력을 탄압하고 체제 안보, 정권 유지만을 위해 사용되어온 국가 보안법이 온 민중 앞에 악법 중의 악법임이 드러났는데도 우리의 노동 운동을 이 독재 악법으로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막걸리 한 잔 먹고 내 손으로 대통령, 국회 의원 뽑는 것만이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상식만을 가진 민중일지라도, 국가 보안법, 집시법, 노동 악법, 교육 악법 등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독재의 법정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중을 배반하는 악법도 법이란 말입니까?

물론, 현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법도 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 보안법은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사회 경제적 변혁 의지, 민중의 생존권적 요구, 사상과 조직 결성, 언론·집회·학문의 자유 일체를 억압해 줄 수 있는, 정권 안보의 최대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 주는 독재의 논리로 본다면 얼마나 소중한 법입니까. 하나의 법 질서를 놓고도 이렇게 상반된 입장, 해석,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란 지배 계급의 이익, 지배 권력의 논리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중의 논리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재판부에, 본 사건을 독재의 논리가 아닌 민중의 논리로 바라보아 우리의 노동 운동을 국가 보안법으로 구속하는 것도 부당할 뿐더러 국가 보안법 자체도 역사 발전을 저해하는 반민중적인 법이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판결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히 독재의 논리, 체제 수호의 논리,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정권 안보의 논리에 입각해 본 사건을 바라보고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의 지난 활동이 얼마만큼이나 현 독재 체제에 위해를 가했으며, 얼마만큼이나 복한을 이롭게 했는지가 좀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 사건에 대한 노동자·민중적 변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재판부에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더욱 철저히 독재의 논리, 체제 수호의 논리, 정권 안보의 논리에 입각해 심판하기를 요구한다.

첫째, 우리의 지난 활동이 얼마만큼 반체제적인 활동이었고, 우리를 구속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논거는 무엇인가? 그 행위가 목적적으로든 결과적으로든 얼마나 복한을 이롭게 했는가를 명백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지난 활동을 사실적이고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 변혁적 활동은 이를 탄압·금지하려는 정권측의 일방적인 논리에 의해 왜곡·조작되거나 과대 포장 또는 축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폭력적인 독재 정권의 논리일지라도 계엄하의 군사 재판이 아닐진대 우리를 구속하고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타당한 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건 역시 치안 본부, 검찰, 1심 재판부에 의해 왜곡, 매도된 결과, 이적 단체 구성이라는 엄청난고도 불명예스러운 (자세한 것은 차후 언급하겠습니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의 사실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이 사건을 다루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사실에 기초해 우리들의 행위가 현행 국가 보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근거 있게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심 재판부는 본인 등이 1심 법정에서 공소 사실과는 분명히 상반된 진술을 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진술을 무시한 채, 유죄 판결의 기초로 삼는 법적 횡포를 보여주었습니다. 도대체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재판과 판결에 한 치도 소용이 없다면 무엇하러 재판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한 진술 과정에서 진실만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소수의 독점 재벌과 군부 세력이 대다수의 민중을 지배하는 독재 통치하에서의 진실이란 민중의 이익과 역사 발전의 논리에 입각해 지난 활동을 사실적이고도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진실은 늘 민중의 힘에 근거한 역사 발전 과정에서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수천

진실은 민중의 힘에 근거한 역사 발전 과정에서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명을 확실해 놓고 광주 폭도의 만행이라 매도한 독재 정권의 사기극을 6월 항쟁의 힘으로 밝혀낸 이 땅의 민중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역사 발전의 도도한 물결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것입니다.

## 2. 안양 지역 민주 노동자 일동 그룹 사건

‘안양 지역 민주 노동자 일동 그룹 사건은 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노동 운동과 관련된 사건인 것 같은데……. 노동 운동 단체입니까?’ 보통은 사건명을 들으면 대개 사건의 성격이나 내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자당 점거 사건, 임수경 양 방북 관련 사건, 인노련 사건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본사건의 사건명을 대하는 대개의 분들은 바로 위와 같은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노동 운동이나 변혁 운동에 대한 이해가 다소나마 있는 분이라면 본 사건명을 대하고서는 현재의 노동 운동 상황으로 볼 때 노동 운동 단체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내거는 강령과 규약, 그리고 이에 근거한 명칭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데, 노동자 동맹이니 노동자 연합이니 하는 단체는 들어봤어도 노동자 일동이라니! 민주 노동자 일동이란 단체가 있는가? 급성장한 변혁 운동 상황으로 볼 때 몇 명에 불과한 소규모 모임이나 뭉뚱그려진 그룹이 정치적 단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등등의 의문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즉, 단순히 명칭만을 떼어놓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객관적 수준을 놓고 볼 때 본 사건의 경우에는 명칭만을 보고서는 정확히 노동 운동 관련 조직 사건인지를 확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양 지역 민주 노동자 일동 그룹’이란 민중 민주주의 쟁취

를 위해 투쟁하는 안양 지역의 민주 노동자 전체를 일컫는 통칭입니다. 즉, 안양 지역의 민중 민주주의 그룹(안양 PD 그룹이라 통칭)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몇몇의 정치 선전물에 ‘안양 지역 민주 노동자 일동’ 혹은 ‘민중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일동’이란 명칭이 사용되어 이러한 통칭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룹은 아직 노동 운동 단체로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념이 강령과 규약으로까지, 추상적 운동 집단이 단체적 조직 체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민중 운동 진영’ 혹은 ‘노동 운동 진영’과 같이 안양 민중 민주주의 진영이란 표현이 말해주듯 뭉뚱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안양 지역의 민중 민주주의 진영은 노동 운동 단체로서의 조직성, 대표성, 활동성을 가지지 못한 채 추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개별 집단 소그룹 등 썩클적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양 지역 민주 노동자 일동 그룹’ 사건이란 한마디로 안양 지역의 민중 민주주의 진영을 단일한 정치 조직으로 묶어 세워 이를 바탕으로 안양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의 노동자들을 정치 세력화시킴으로써 노동 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사건입니다.

87년 7, 8월 이후 발전 고양되어가는 대중 투쟁은 남한의 토대의 성격 변화 및 사회 성격에 따라 국가 권력과의 직접적 투쟁과 대립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노조라는 대중 조직으로서의 좀더 능동적인 대정부 투쟁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였습니다. 즉 대중 조직이 단순한 계급 이해 투쟁 이상으로 정권의 탄압에 방어적이지 않는 공세적 투쟁으로 발전하기에는 그 조직적 투쟁적 한계를 분명히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가 제반 노조 지원 외곽 단체 및 노우협 등의 정치적 지원·지도 역량을 요구하였고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 조직의 정치적 진출을 통한 그 정치적 역할이



이 사건은 안양 지역 PD 진영을 단일한 정치 조직으로 묶어 세워 정치 세력화를 꾀한 사건입니다.

중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꾸려진 우리의 활동을 6하 원칙에 입각해 간단히 정리해 보면, (1) (누가: 활동 주체) 안양·군포·안산 등 경기 남부 지역의 노동 현장에서 임금 인상 및 민주 노조 건설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몇몇 활동가들이, (2) (언제: 활동 시기) 89년 4월경부터 동년 9월초까지, (3) (어디서: 활동 범주) 안양·군포 지역에서, (4) (왜: 활동 목적) 이 지역의 노동자 및 민중 민주주의 진영의 정치적 조직적 진출을 위해서, (5,6) (무엇을 어떻게: 활동 내용) 편집팀을 구성하여 노동 운동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노동 운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토론·연구하고 몇몇 유인물을 작성·배포하다가 연행·구속된 사건입니다.



### 3. 사건의 배경

#### 1) 89년 정세 기초

8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정세의 특징은 “신데땅뜨 기류”의 강화와 확대에 있으며 이러한 신데땅뜨 기류의 창출은 소련의 평화 공세가 주요한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평화 공세는 소련의 선도적인 군비 축소, 핵무기 철폐, 주둔군의 철수에 의해 제국주의 진영에 의한 냉전적 군사 대립의 현실적 기초를 와해시켜 가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고양되고 있는 반전 반핵 평화 운동 및 민족 해방 운동과의 정치적 결합을 통한 대중적 기초의 강화와 시장 개방·경제 교류를 통해 평화적 국제 정치 질서의 경제적 토대를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국주의 진영의 중심, 즉 미제의 군사 도발 정책을 고립, 무력화시켜내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평화 공세는 과거 데땅뜨 국면이 “정치적 타

협”에 머문 일시적이고 계기적인 성격이었던 것과 달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며, 실질적인 군사 긴장의 해소를 통해 냉전 논리의 허구성이 폭로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대응은 정치 군사적으로 지역 방위 분담에 의한 직접적이고 군사적인 개입을 은폐시킴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국제 분업 체계의 재편을 통해서 “지역 블럭 체제”의 형성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는 미제국주의의 군비 확장 노선이 수정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유럽·아시아 지역에 걸친 대소 방위 전선의 책임을 각 지역의 자체 군사력 강화를 통해서 해결함과 동시에 미제국주의의 주도적 위치를 계속 고수하기 위한 전략 방위 구상(SDI) 전략의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및 군사 장비의 현대화 요구, 그리고 이에 기초한 주한 미군의 부분 철수 등은 미제국주의 전략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와 선진 자본주의 제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 공세에 의한 국제적인 긴장 완화 흐름은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세계 곳곳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의 영향은 미소 대립의 첨단 위치를 점해 왔던 한반도에서 작용하여 블라디보스톡 선언,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 등을 통해 극동 아시아의 긴장 완화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 공세에 의한 국제적인 긴장 완화 흐름은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세계 곳곳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균등 발전에 의한 제국주의 진영 내부의 피할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은 대소 방어, 자본주의 진영내의 계급 투쟁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협조 정책을 유지하는 선에서 무역 전쟁, 과학 기술 전쟁, 금융 전쟁을 통한 주도권 싸움으로 변형되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 진영간의 경제 대립은 제국주의의 생리 상 대소 방위를 위한 군사 첨단 산업과 정보 산업에서의 우위



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국주의의 중심인 미제는 이미 전략 방위 구상(SDI) 전략의 추진으로 막대한 군수 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각국을 이 계획에 포섭하여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초래되는 미국의 산업 공동화 현상을 환율 조정, 보호 무역주의의 강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분업 체제에 깊숙히 편재되어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소비재 및 중화학 공업에 기초한 산업 구조를 첨단 산업으로 재편성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시장의 다각화가 절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제 3세계로의 사양 산업 이전 및 중화학 공업 등에서 축적한 기술 이전과 사회주의권의 시장 개방에 따른 적극적 교류의 모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공화국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폭압 체제를 부분적으로 개량화하여 민중의 자생적 한계를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6공화국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폭압적 정치 체제를 부분적으로 후퇴시키면서 민중의 투쟁이 반체제, 반파쇼 정치 투쟁으로 비약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민중의 자생적 한계를 개량적으로 역이용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파쇼와 민중의 적대적 대립을 완충할 제도적 장치로서 의회 장치를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둘째, 냉전·반공 이데올로기의 부분적 후퇴를 대신하여 자유 민주 체제 수호 이데올로기의 유포와 장기적으로는 좌우 이념 대립이라는 사상 공세를 전개하면서 민중 내부의 분열로 호도하여 자유 민주 체제에 대한 체제 전복 세력으로 민중 투쟁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공권력의 탄압 폭을 넓히고 그 합법성을 강화하여 민중 운동 진영의 대중적 기초를 잠식해 들어가고자 하는 고도의 탄압 정책인 것입니다. 셋째, 북방 정책 및 남북 교류의 활성화를 모색하여 냉전 논리에 의해 협소화되기 쉬운 정권의 정통성

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초하에 전개되고 있는 6공의 지배 정책은 총선·올림픽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중 진영은 87년, 88년을 통해서 각 계급의 독자적 요구의 신장과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꾸준한 진출을 거듭해 왔습니다. 노동자 계급은 노조 민주화 투쟁을 통한 조직 건설의 확대와 이를 통해 지노협, 전노운협이 건설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국적 연대의 기초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 계급 투쟁과 함께 여타 기층 민중의 투쟁의 활성화와 조직 건설을 위한 노력은 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총화로 89년 1월에는 전국 민족 민주 운동 연합이 결성되어 전국적 운동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중 운동은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투쟁의 질적 측면에서는 개별, 고립 분산적 경제 투쟁을 벗어나지 못한 것과 이로 인해 파쇼의 고도의 지배 정책을 분쇄할 정치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 못하며, 아직도 소시민적이고 개량적인 정치 투쟁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밑으로부터의 대중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구심의 형성에는 지극히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전민련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기층 민중과의 결합력 및 정치 지도력의 한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민련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기층 민중과의 결합력 및 정치 지도력의 한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2) 87년 7·8월 투쟁 이후의 88년·89년의 노동 운동

88년은 노동 운동이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와 계속되는 민중의 정치적 진출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이룬 해였습니다. 우선 88년은 양적인 면에서부터 급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88년 10월말까지 총 1,686건의 사업장 투쟁이 발생하여 7·8월 투쟁 이전인 86년의 276건과 비교하면 약 7~8배의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노동 조합의 조직에서도 조합 수 5,200여 개, 조합원 수 160여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70여 개의 조합에 40여 만의 조합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민주 노조들은 어용적인 대한 노총의 개량화 책동을 물리치고 지역별, 업종별로 연대 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하여, 지역별 노동 조합만도 전국 8개 지역, 300여 가입 노조에 10만 이상의 조합원이라는 막강한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투쟁과 조직 활동의 경험 속에서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정치 의식 또한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서울의 맥스텍, 구미의 계림 요업의 위장 폐업 분쇄를 위한 연대 투쟁으로 시작하여 울산 현대 엔진의 민주 노조 사수 투쟁, 지하철 노동 조합의 직제 개편 투쟁, 철도 기관사들의 파업 투쟁으로 이어진 88년의 투쟁은 임금 인상 투쟁, 민주 노조 건설 및 사수 투쟁, 노동 운동 탄압 분쇄 투쟁, 노동 악법 개정 투쟁 등이 서로 연결되면서 전개되어 '노동 운동이란 단지 임금 몇 푼 올리기 위해서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사장과 담판짓는 것만은 아니구나'하는 자각이 투쟁의 현장에서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정당한 임금 인상 요구와 조합 결성, 조합 활동 보장 요구, 노동 악법 개정 요구가, 자본가와 정치의 무자비한 탄압에 의해 짓밟히는 현실, 선진적인 동료 노동자들이 구사대와 백골단의 테러에 마빡이 깨지고 척추가 부러지는 현실, 자본가에 매수되어 사주받은 폭력을 휘두른 구사대원은 석방되고 노조의 정당 방위 대원은 폭도로 매도되어 구속되는 현실을 투쟁의 현장에서 뼈저린 아픔과 각오로서 삼켰던 것입니다. '자본가와 정권은 한편이고 노동자의 동일한 적'임을 깨달았고, '연대 투쟁·연대 조직 건설만이 우리의 살길이요, 노동 운동은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의 결합'임을 자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과 조직 활동의 경험 속에서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 정치 의식 또한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자각에는 노동 운동 단체들의 선진적인 활동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즉, 노동 운동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과 민주 노조 운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 운동 단체의 결성 및 활발한 활동 전개는 민주 노조 운동의 성장과 함께 88년 노동 운동이 거둔 중요한 성과이었던 것입니다. 자본가와 독재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정치적 힘이 방과제 역할을 해주지 않는 한 대중 투쟁의 활성화와 승리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전두환 군사 독재하에서의 어려웠던 노동 운동 경험과 6월 항쟁 이후의 7·8월 투쟁에서 역사적으로 경험·검증한 변혁적 노동 운동 세력은 터져오르는 민주 노조 운동을 지원하고 노동자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동 운동 단체들을 결성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88년 2월부터 시작한 현대 엔진 노조 사수 투쟁이 대대적인 탄압을 받자 이에 공동 대응·연대 투쟁을 벌여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6월 7일 전국 노동 운동 단체 협의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전국 노운협은 한편으로 당시 활발하게 전개되는 민주 노조 운동을 지원·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와 민중간의 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정치적 선전과 훈련을 수행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88년의 노동 운동 상황은 89년 상반기 투쟁을 거치면서 노동 운동의 모든 선진 노동자들에게 지노협과 전국 노운협의 대열에 동참해서 '전노협 건설'과 '전국적 노동자 정치 조직 건설'에 매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노동 해방과 민중 해방을 향한 힘찬 도정을 선언한 노동자 대열 앞에서 '점차로', 좀더 민주적인 정부=선거에 의한 민간 정부를 세우다보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그릇된 정치 의식은 더이상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스스로, 민중 스스로 권력의 주체로 나서지

또한 자본가와 정권은 한편이고 노동자의 동일한 적임을 깨달았고, '연대 투쟁·연대 조직 건설만이 우리의 살길이요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결합'임을 알았습니다.

생존권 투쟁이 없으면 안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노협 건설'과 '전국적 노동 승리하기 위해서도, 사회 변혁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자 정치 조직=그 최고 형태로서의 '노동자 정당 건설'이라는 과제 앞에서 "내가 속한 지역 사업장에만 전념하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기업별 노조 의식이나 "노동자는 임금 인상 등 제 몫 찾기 투쟁만 하면 된다"는 경제주의적인 사고와 활동은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노동자 스스로 사회 변혁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 4. 사건에 대한 변론

##### 1) 우리의 현실 인식과 북한의 혁명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굳이 국가 보안법의 부당성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파쇼 통치를 유지해 주는 최후의 보루였던 국가 보안법은 이제 민중의 논리로나 지배 계급의 논리로나 시대 착오적인 악법 중의 악법임이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은 첫째,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 해방 이후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입각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이룩한 엄연한 국가인 것이며, 둘째, 북한의 주체 사상 및 한반도 통일 전략과 우리의 민중 민주주의 이념 및 전략은 근본적으로 상이합니다. 간단히 북한과 우리의 현실 인식과 변혁 과제에 대한 차별성을 언급해보기로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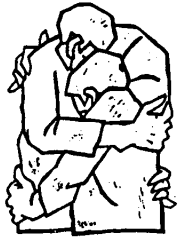
북한은 남한 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 규정하는 반면 우리는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적 규정을 받으면서 굴절된 자본주의 발전을 거친 결과 아직껏 자본주의가 사회

전반에 전일화되지 못하고 반봉건적인 요소인 지주 소작 관계의 온존과 전근대적 자본 운영 방식 등이 잔존하여 이로 인해 대다수 민중들이 질곡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의 본질적 요소는 미제국주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여 변혁의 주된 대상으로 미제국주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일정 정도 제국주의에 의해 굴절당하고 있는 사회임을 인정하나 사회 전반에 자본주의가 전일화되었다고 보며 낡은 생산 관계인 반봉건적 관계는 점차 도태되고 있으며 반봉건적 요소보다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로 전민중이 질곡당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일반으로부터 파생되는 요소의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차별성은 변혁의 과제에 대한 인식과 경로에 대한 차별성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는 바, 북한은 남한 변혁의 당면 과제로 민족 해방을 설정하고 계급 해방을 그에 복속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 모순인 계급 모순의 해결을 주요 과제로 상정하고 또한 제국주의 문제는 파쇼 체제를 통해 동시적으로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파쇼 체제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 타도 투쟁과 분리되는 과제가 아니며 오히려 동시 해결고리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족 문제의 해결 역시 계급 문제의 해결 과정에 동시 내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 속에서 독자적 주체 역량에 근거한 남한 혁명을 수행해내어 민중 권력을 쟁취해내고 민중 권력에 입각한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속에는 북한과 우리의 현실 인식과 변혁 과정 등에 대한 차별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편집팀 활동의 성격



파쇼 타도 투쟁과 제국주의 타도 투쟁은 우리의 과제 해결을 위한 동시 해결고리입니다.

우리들의 활동은 드러난 바 '메이데이 100주년 기념 대회에 부처', '현정세의 성격과 민민 운동의 과제' 등 제작·배포한 유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 계급은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주역으로서 사회 변혁의 주체로 나설 것과 그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선동함으로써 반체제적이고 반정부적인 사회 변혁적 활동이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건의 유인물 제작에 그친 편집팀, 6명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 모임에 불과한 편집팀이 정치 단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변혁적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 단체라면 자신들이 내거는 이념에 근거한 강령과 규약, 결성식과 조직 간부 및 조직원 확보, 실질적인 활동 내용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노동 조합 조직만도 규약, 회의록, 사업 계획서, 조합원 가입 원서 및 임원 취임 승낙서 등의 서류가 최소한 설립 및 활동의 준거로 확보되어야만 조직으로 판정되는 데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강령·규약은 물론 조직 명칭조차 애매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정치적 목적의 단체로 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본인은, 본 편집팀은 이적 단체일 수도, 여타 정치적 목적을 지닌 단체일 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현행 국가 보안법에 입각해서도, 아울러 체제 수호라는 지배 논리에 근거해서도 단체적 규정을 내릴 수 없기에 명백히 무죄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편집팀이 과연 이적 단체인지, 이적 단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객관적이고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1심 재판부와 같이 우리의 진실된 진술과 근거를 전혀 무시한 채 기존의 논리대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땅 4천만 민중들의 유일한 희망인 노동 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모든 활동들은 그 씨조차 말려버리겠다는 파쇼적 폭압

통치의 일방성을 보여주는 처사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5.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와 노동자 정당 건설



본인은 위와 같은 변론에 기초하여 노동 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우리들의 활동이 무죄임을 주장하는 바이며, 아울러 역사적 정당성을 지니는지를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역사 발전에 기초해 말씀드리면서 본 항소 이유서를 마칠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우리 나라 노동자들은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 운동을 보면 노동 조건보다 정치적 요구를 내거는 등 순수한 노동 운동으로부터 불순한 정치 투쟁으로 변질되었다. 지하철 노조에서 왜 전교조 인정을 요구하고, 전노협에서 왜 노태우 정권 끝장내자고 외치는가?"라고.

그와 같은 지적은 일면 우리의 노동 운동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기에 이에 올바르게 답하는 것은 선진 노동자로서 활동해 온 노동 운동가들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노동 운동이 정치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그를 위한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는 '전교조 인정'에서 나아가 '추곡 수매가 인상', '대책 없는 철거 반대', '노점상 보호' 등을 요구하며 노동 운동이 전체 민중의 해방을 선도해 나가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난 시기 노동 운동을 되돌아 봄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밝히고 그 현실과 전망을 진단하여 노동자 계급 운동 전체의 대의와 우리 자신의 활동이 정당하였음을 밝히고자

우리는 노동 운동이 정치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편집팀은 이적 단체일 수도, 여타 정치적 목적을 지닐 수도 없습니다.



합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하신 지 어언 20여 년이 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스스로에 의해서나 사회 일반에 의해서나 ‘불쌍한 하층민’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전태일 열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분신, 산화하시게 되었는가는 이제 노동 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동료 노동자를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진실로 노동자를 위한 공장 설립을 구상하고, 근로 기준법을 공부하면서 법에 보장된 근로 조건을 쟁취해 내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싸우고, 이러한 너무나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당한 노력들이 거부당했을 때, 바로 전태일 선배는 당장의 눈앞의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800만 노동자의 각성을 위해 스스로를 불꽃으로 하여 산화하셨던 것입니다.

저 폭압의 상징이었던 유신 체제하에서도 전태일 열사가 뿌린 씨앗은 민주 노조 운동으로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암흑의 70년대 내내 이 땅의 노동자들, 특히 유약한 여성 노동자들은 ‘근로 기준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구세주를 만난 듯 환호성을 터뜨리고 가슴을 떨어야 했습니다. 긴급 조치라는 거대한 침묵의 바윗덩어리 틈새를 비집고 봄바람처럼, 신화처럼, 복음처럼 들려오는 노동 조합과 파업의 소식들에 전율하였으며 스스로 조그마한 싸움들에 떨쳐나가면서 유약한 여성 노동자로부터 70년대 민주 노조 운동을 떠받쳐 온 자랑스런 투사로 변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민주 노조 운동에 무차별적으로 가해져오던 부도덕하고 폭압적이며 파렴치한 유신 정권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마침내 79. 8. YH 무역 노조 투쟁에 이르러서는 고 김경숙 선배의 희생을 토대로, 철용성 같기만 하던 유신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금 유신 체제가 얼마나

폭압적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서울의 봄’ 혹은 ‘민주화의 봄’이라 불리우던 80년 봄, 소수 독점 재벌과 정권 야욕에 눈이 멀었던 정치 군부 세력들에게는 암담한 시절이었을 그 해 봄이 수십 년을 말 못하는 기계처럼, 순종하는 노예처럼 살도록 강요받아온 노동자와 민중들에게는 얼마나 큰 환희와 해방의 시기였는지만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그 해 봄, 구로 공단의 임금 인상 투쟁과 멀리 부산 동국제강의 파업 시위, 70년대 민주 노조 관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 각 공장 지대에서의 노조 결성 투쟁, 사북 광산 노동자들의 항쟁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897건의 노동자 투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5·17 쿠데타로 중도 좌절되기는 하였으나 이 같은 투쟁은 자본가 계급에게는 성장 저하, 이윤 감소라는 타격을 가하였던 반면, 노동자 계급에게는 임금 인상이라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열기로 민중의 정치적 관심은 한껏 고조되었으나, 정권 야욕에 눈먼 정치 군부에게는 그것이 더없는 혼란과 위기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 매사가 그러하듯이 동일한 상황을 놓고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소수 지배 계급과 해방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는 민중들은 이처럼 정반대로 해석하고 선전하게 마련입니다. 본 항소 이유서의 머릿말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기반한 계급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성장 저하와 자본 축적의 위기, 수출 부진, 정치적 혼란과 사회 질서 마비, 체제 수호, 북한의 남침 위협, 전쟁 가능성 등은 소수 지배자의 논리이며, 임금 인상, 노동 조합,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노동 해방과 민중 해방 등은 바로 노동자와 민중의 몫이자 논리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해 및 국가 사회 생활상의 제조건들이 하나로서 일체화되어 있는

80년 서울의 봄은 노예처럼 살아온 노동자와 민중에게는 커다란 환희와 해방의 시기였습니다.

저 폭압의 상징이었던 유신 체제하에서도 전태일 열사가 뿌린 씨앗은 민주 노조 운동으로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80년 봄의 투쟁을 기억하고 있는 노동자들 가운데 ‘민주주의 만세’를 외쳐보지 않았다면 진짜 노동자라 할 수 없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0년 봄의 노동자들은 다만 그 같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느꼈을 뿐 당시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조직화하여 권력의 주인으로 나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화가 되니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 투쟁에 매우 유리하다’는 정도의 의식이 일반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정권욕에 눈먼 일부 파렴치한 군부 세력의 5·17 쿠데타로 인해 광주 민중의 영웅적인 항쟁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민중 세력은 정치적으로 패배하였으며 민주주의는 전두환·노태우 일당의 군홧발 아래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알면서도 힘이 없어 못했건, 아예 어찌할 바를 몰랐건 간에 정치적 패배의 대가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1,500여 명의 정치인·학생들이 검거·투옥되었습니다. 100여 명 이상의 노조 간부들이 구속되거나 삼청 교육대에 보내졌으며, 그 외의 노조 간부 대부분이 ‘다시는 앞장서지 않겠다’는 치욕스런 각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격은 거기에서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탄압의 광란이 지나가고 난 후, 과거 투쟁 전력이 있었던 민주 노조들은 정권과 자본가의 공격, 자본 이전으로 인한 폐업 조치 앞에서 하나씩 와해되었습니다.

반도 상사, 한일 공업, 콘트롤레이타, 원풍 모방, 서통 물산 등의 막강한 노동 조합,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청계 피복 노동 조합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구사대, 삼청대 등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한 패배와 함께 전두환 정권은 노동자 계급에게 4년간에 걸친 임금 동결 정책을 강요하였습니다.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는 방관적인 노동자들에게도 시련은 똑같이 냉혹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5공화국 시절 즉 소수 지배자들에게는 엄청난 부와 성장의 과실을 몰아다준 태평 성대의 요순 시절이요 노동자와 민중에게는 한없는 치욕과 수모, 고통의 세월이었던 저 전두환 정권의 폭압 통치를 경험한 노동자라면 “더이상 정치를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 정치 투쟁에서 승리하지 않는 한 애써 싸워 얻은 조그만 성과들조차 즐지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실로 뼈속 깊이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1984년 3월, 과거 민주 노조 운동 진영의 역전의 투사들이 다시 모여 결성한 한국 노동자 복지 협의회, 대구 택시 파업 시위, 소위 유화 조치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200여 개에 달하는 신규 노조의 결성 등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시금 불씨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1985년 봄 전두환 정권의 탄압에 맞선 노동 운동 탄압 저지 투쟁 위원회, 해고 노동자들의 가두 정치 투쟁, 구로 동맹 파업 등으로 이제 과거 쓰라린 패배의 기억을 간직하게 된 노동자들은 즉각 전두환 정권에 맨몸으로 대항해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노련·인노련과 같은 노동자들의 정치 투쟁을 담당하는 조직까지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85년 하반기 이후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은 정권 교체기의 주도권과 장기 집권 음모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시금 민중 운동 전반에 대한 탄압을 가해왔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은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명 직전의 어둠이 더욱 짙다는 말처럼, 그러한 폭압은 전두환 정권의 폭정의 말로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고문 살인 사건을 계기로 투쟁 대열에 나서기 시작한 민중은 마침내 6월 항쟁이라는 새로운 민중 운동의 장을 열어젖히게 되었으며 민주화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80년 민주화의 봄과 뒤이은 쓰라린 좌절의 경험을 간직하고 대우 자동차와 구로 동맹 파업의 경험을 간직한 노동 운동은,



85년 하반기 이후 전두환 군사 정권은 정권 교체기의 주도권과 장기 집권 음모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시금 민중 전반에 탄압을 가해 왔습니다.

정권욕에 눈먼 파렴치한 군부 세력의 쿠데타로 영웅적인 광주 민중 항쟁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군홧발 아래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다가온 민주주의의 상황 속에서 노동자 대투쟁의 대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정치적 변화가 노동 운동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같은 정치적 변화를 뚫고 어떻게 진출해야 하는지를 그간의 희생과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7년 7월  
울산으로부터 시작된  
투쟁의 열풍은  
전국을 휩쓸면서  
노동자·민중들에게  
해방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987년 7월초 울산으로부터 시작된 투쟁의 열풍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대도시와 공장 지대, 심지어는 도심지 빌딩의 사무실까지 강타했으며 질서 정연한 노동자 전투 부대의 대오는 연일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그간 억눌려왔던 전국의 노동자·민중들에게 해방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가슴 몽클한 민중 혁명의 싹을 느꼈던 것은 노동자와 민중만은 아니었습니다. 연일 신문을 통해 소수 지배자들, 독점 재벌 및 독재 정권측은 마치 민중 혁명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듯이 사회 혼란, 체제 수호의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찬 목소리로 삼복 더위와 기나긴 장마가 계속되던 87년 7~9월 3개월 동안 3,500여 건에 달하는 투쟁에 연인원 300여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평균 19.7%에 이르는 임금 인상 쟁취와 1,100여 개에 이르는 신규 노동 조합을 결성하는 등 이전의 시기 동안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성과를 이룩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대투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주역은 어느 계급이며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너무도 명확히 드러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노동자 계급은 한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계급이며, 그에 상응한 경제적·정치적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요구의 관철을 위해 스스로의 힘을 내보이며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간의 뼈아픈 패배의 경험으로부터 배워, 정치적 제조건의 변화를 이용하여 더욱 배가된 힘으로 싸우는 방법을 체득하였으며 또 실제로 그 같은 모습을 연출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각성이 그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였음에 비해 조직적 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왔습니다. 철저히 싸울 줄 알았으며 또한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결사 항전의 각오로 처절하게 싸우기도 했으나 그 의지와 투쟁의 성과를 정치적 힘으로 조직화하고 사회 변혁적 의식으로 무장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전열을 정비한 전두환 정권의 탄압과 보수 야당의 방조 속에서 노동자 계급은 눈물을 머금고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뒤이어 벌어진 대통령 선거와 총선 과정에서는 스스로의 정치적 대변자, 정치적 조직화는 물론 대안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금 정답 없는 답안지에 마지못해 동그라미를 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의 대응 전술간에 율고 그림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노동자는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를 놓고 갈등하지 않았으며, 노동자 계급 스스로가 정치와 권력의 주인으로 나서려는 준비 없이는 어떠한 전술도 ‘훈수들기’나 ‘재주부리는 꿈’의 수위를 크게 넘을 수 없다는 점만을 뼈아픈 교훈으로 새겨두고자 합니다.

1988년 이후 최근까지 노동 운동의 전개 과정은 이 같은 교훈으로 배운, 노동 운동의 가장 큰 정치적 결함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전노협의 건설과 전국 노동 운동 단체 협의회의 건설 과정에 이르는 88년~90년의 과정은 바로 노동자 계급 스스로가 정치 세력화해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시기 전노협과 전국 노운협을 중심으로 한 모든 노동 운동 진영이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한 현실 그 자체는 이미 이 땅의 노동자 계급이 진출하고 있는 발걸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전농련·전교조·전대협·민연추 등과 함께 전체 민중 운동



정치적 조직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대통령 선거와 총선은  
정답 없는 답안지에  
마지못해  
동그라미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의 대오를 형성하고 이를 주도해나갈 대중적·조직적 기초를 형성하였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인은 바로 이 같은 우리 노동 운동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최종적 준비, 정치적 진출을 거듭해 온 노동 운동의 진전 정도에 걸맞게 또한 그것을 앞질러나가 최종적 승리를 담보해 줄 가장 강력한 조직적 준비, 즉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을 조직하는 데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자 계급과 민중이 착취의 본질에 입각한 사회 질서를 전면적으로 타파하고, 우애와 연대의 바탕 위에서 노동하고 생산하는 자들의 자유롭고도 민주적인 연합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동자 계급 운동에는 다음과 같은 긴급한 임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주의자들과 선진 노동자, 노동 운동의 서클과 조직들은 노동자 계급의 단일한 전국적 정치 조직 건설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사회주의자들과 선진 노동자, 노동 운동의 서클과 조직들은 노동자 계급의 단일한 전국적 정치 조직 건설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론적 영역에서는 한국 사회의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민중 운동이 내걸어야 할 공동의 강령을 수립하는 것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실천적 영역에서는 이러한 강령을 토대로 노동자 계급과 민중에 대한 선전과 선동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이 각 영역에서 강령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반동적 국가 권력과의 투쟁에 떨쳐 나설 수 있도록 고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만 사회주의자와 선진 노동자들은 노동 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가운데 그들의 정치 지도자나, 투쟁 지도자, 그리고 정치 조직의 조직원으로 훈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룹과 조직들은 노동자 계급의 단일한 통일된 정치 조직의 건설을 제일의 과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실천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투쟁 및 활동의 중심을 노동자 계급과 민중 속에 세우고, 제도 정치권에서의 개량적 환상으로부터 시급히 벗어나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전면

적인 정치적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교육 민주화 투쟁, 언론 민주화 투쟁 등 각 계급·계층의 광범위한 민주화 투쟁을 고무시켜 정권을 전면적으로 포위해 들어갈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노동자 계급과 전체 민중이 국가 권력과의 전면적인 투쟁 속에서 새로운 민중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득하면서 민중 권력을 지금부터 준비해가는 계급적 정치 투쟁의 본령입니다. 셋째, 정치적 선전과 선동을 강화하여 민중 민주주의의 이념이 노동자 계급과 민중 속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노태우 정권은 이미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선전 공세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부르조아 관제 언론은 매일 개개의 사건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의 환상을 유포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체제 우위를 선전하고 있으며 자유 수호 구국 연맹 등 극우 단체들은 조금의 사상적 이탈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각 공장과 직장까지 극우 테러 단체의 지부들을 조직하여 이념적 대립은 각 공장과 직장 단위까지, 조그마한 투쟁에 이르기까지 참여화될 조짐입니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과 민중이 온갖 방면에서 퍼부어지는 저들의 이념 공세를 정면에서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민중 민주주의 이념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어렵게 조직된 투쟁도 쉽사리 무력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회주의자와 선진 노동자들은 모든 시기와 계기를 통해 “민중 권력의 창출과 독점 재벌의 해체, 기간 산업의 국유화”를 축으로 하는 정치적 요구와 계급적 요구를 선전하여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풍부히 그려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 지배 정권과 자본가들의 억압과 착취의 모든 수단들을 날날이 폭로하고 이에 대항해 떨쳐 일어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은 노동 운동이 왜 정치 투쟁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등에

모든 투쟁 및 활동의 중심을 노동자 계급과 민중 속에 세우고, 제도 정치권에서의 개량적 환상으로부터 시급히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적 선전 선동을 강화하여 민중 민주주의의 이념이 노동자 계급과 민중 속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대하여서는 구차하게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노동 운동의 역사와 현실이 “노동 운동은 정치 운동·사회 변혁 운동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의식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필연성과 필요성을 웅변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노동 운동의 현주소야말로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라는 과제를 절실하고도 명쾌히 요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동 운동이 정치 운동으로, 사회 변혁 운동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은 불순한 변질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며 합법칙적인 발전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가와 독재 정권이 노동 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놓고 불순하다고 퍼뜨리는 행위는 지극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순수나 불순이냐를 가지고 노동 운동의 자본가적 성격과 노동자적 성격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가들에게는 오로지 생산성 향상과 이윤 추구라는 자본 운동밖에 없으며 독재 정권의 편에선 이러한 자본 운동의 논리에 의해 노동 운동이 포섭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의 실제적 준비에 착수하는 것은 작금의 선진 노동자들에게 가장 용기 있고 중대한 결단이자 과제임을 확신합니다. 물론, 전노협과 전국 노운협 및 이를 선진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선진 노동 운동 세력이 극심한 탄압을 받아온 관계로 더욱 어렵고 엄중한 현실이지만 더욱 튼튼한 정치 조직, 더욱 굳건한 노동자 정치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노동 운동뿐 아니라 전체 민중 운동 차원에서 요구되는 과제임을 말씀 드리면서 본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을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II. 반제 반파쇼 민중 민주주의 혁명론

### 1. 노동자의 사상—민중 민주주의

왜 우리가 반제 반파쇼 민중 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지향하려 했었던가를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사회는 해방 이후 농촌의 계급 분화와 초기적 단계의 자본주의 생산력에 기초한 자본주의 발전 과정이 아니라 미제의 신식민지 전략에 의해 규정되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특수한 발전 구조를 갖게 됩니다. 즉 남한 사회를 국제 분업 체계 속에 종속시킴으로써 제국주의 자본의 이해가 관철될 수 있는 구조로 정착시킨다는 미제국주의 전략에 의해 남한 사회는 처음부터 미제국주의에의 예속을 전제로 해야만 자본주의 생산 관계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한 사회내 자본주의 생산 관계가 전일화되는 과정을 간략히 얘기해 보면, 남한 자본주의화의 규정적 요인은 미제국주의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으로서 한미일 안보 체제 및 경제 불력 체제를 형성하여 동북 아시아에서의 대 사회주의권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남한을 한미일 경제 관계에서는 수직적 분업 체계의 최말단의 역할을 담당케 하여 미일의 경제 위기의 완충 역할을 하게 하고, 정치·군사적으로는 사회주의권에 적대적인 계급 및 세력을 남한 자체내에서 재생산시키며, 그들의 물적 기반을



강화하여 스스로 대 사회주의권 및 북한에 대한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떠맡기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한의 연속적 자본화를 적극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 요인과 함께 내부적 요인 역시 그 동력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 전 조선 민중의 반제 반봉건 민중 민주주의 혁명의 전면적 고양과 이를 전폭적으로 수행하는 북한에 자극되어 형식적이거나 남한에서 봉건적 잔재를 해체하여 자본제적 사회 발전으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근거를 해체해 나가야만 했고, 해방 전 일제에 의한 자본주의의 이식으로 자본주의 경제 기반이 일정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상 원조→유상 차관→상업 차관→직합작 투자라는 제국주의의 운동 논리가 관철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외적 요인 속에서 초기 남한 자본주의의 성격은 미제국주의에 종속한 신식민지 자본주의 성격과 국가 권력에 의존하는 관료성을 떨 수밖에 없었으며, 강력한 부르조아 집행 권력을 탄생시키기 위한 물질 토대로서 자본의 급속한 동원을 위해 유통 과정의 조작을 통한 이윤 수탈 구조를 갖는 전근대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자본의 항상적 이윤 창출 구조에는 내부적으로 소상공 생산자 및 중소 자본가의 하강 분해와 저임금 저급가라는 독점 자본의 수탈 구조가 형성되고, 이에 대한 자본 동원력으로 미제국주의의 원조와 차관이 항상적 구조로 정착됩니다. 이 자본 축적 구조의 지속성은 국가 권력의 폭력적 집행 방식에 의해 강제됩니다. 남한 자본주의는 내수 경제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축적 구조를 갖지 않고 미제국주의에 예속되어 민중에 대한 수탈 구조를 갖게 되는 까닭에 자본의 위기 관리 능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구조적으로 갖게 되며 이의 극복은 더욱 미제국주의에 예속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자본의 대민중 수탈 구조의 강화, 독점의 강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 극복은 국가 권력의 폭력

적 집행력으로 확보되고 과정 또한 폭력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연속을 통해 드러나는 현 사회 구조의 특질은 첫째, 현 남한 국가 독점 자본의 주체는 남한 독점 자본만이 아니라 국내에 유입된 제국주의 독점 자본 또한 한 주체가 됩니다. 즉, 현 남한 자본주의 사회의 확대 재생산의 주체는 남한 예속 독점 자본과 제국주의 독점 자본이 결합된 것입니다. 둘째, 구식민지 시대와는 달리 제국주의와의 모순은 남한 내적 계급 모순에 내재화되어 은폐되어 나타납니다. 이미 남한 사회내에 강고한 물질 기반을 가지고 있는 예속 독점 자본 및 그 계열군은 제국주의와 적대적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호 실현 관계에 있으며, 이 예속 독점 자본의 이해를 직접 반영하는 부르조아 국가 체제로서 파쇼 체제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셋째, 남한 파쇼 체제는 남한 자본주의 생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고 남한 독점 자본뿐 아니라 국내 유입된 제국주의 독점 자본 등 총자본의 운동을 보장해 주는 부르조아 집행 권력 독재 체제입니다. 넷째, 제국주의 독점 자본은 그들의 남한 민중에 대한 잉여 수탈 메커니즘을 본국의 정치·군사력이 아닌 남한 파쇼 체제를 통해 관철합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 독점 자본을 전제하지 않는 남한 경제 구조는 파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남한 사회의 기본적인 운동 구조의 본질, 그 내부 동력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시기에 제출되는 남한 사회 변혁의 과제는 대다수 민중의 이익보다는 소수 독점 자본의 이익 위주로 진행되는 현 남한 사회의 모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국주의 세력과 파쇼 세력을 타도하여 민중 권력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민족 통일 국가로 발돋움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단히나마 반제 반파쇼 민중 민주주의 혁명의 내용입니다.

남한 자본주의 사회의 확대 재생산의 주체는 예속 독점 자본과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결합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노동자의 사상으로서 민중 민주주의 이념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노동 운동을 비롯한 기층 민중 운동이 궁극적으로 남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반제 반파쇼 민중 민주주의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굳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 2. 민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중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민중이 그 사회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주인이 되는 정치 이념입니다.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첫째로, 민중이 그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여나가는 정치 권력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 권력을 쥔 계급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서 자신들의 지배 논리에 걸맞는 사회·정치·경제·문화 정책들을 전사회적으로 채택하고 이를 다양한 명분으로 합리화하여 강요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사회는 소수의 독점 재벌과 군부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지배 계급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정권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늘 독점 재벌을 비롯한 자본가 계급과 정치 군부 세력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지배 논리, 즉, 자본주의적 착취 질서와 파쇼와 억압 통치 질서를 사회·경제·정치·문화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를 ‘법질서’란 명분으로 전사회적으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사실은 우리 사회 현실의 곳곳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해 버리는 것, 독점 재벌이 원하면 금융 실명제·토지 공개념 제도도 유보해 주는 것, 군 장성

출신들이 정보 고위직·사회 요직에 앉아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것, 정주영 현대 그룹 회장은 북한을 안방처럼 드나들어도 구속되지 않는 것, 높다란 고층 건물이 즐비해도 자기 집 한 칸은 커녕 월세값 하나 감당 못해 자살하는 서민이 속출하는 것, 모두 이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회의 정치 권력을 어느 계급, 어느 계층이 쥐고 있느냐는 그 사회의 발전에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중 민주주의’란 민중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여 민중 이해와 역사 발전에 기초한 민중적 지배 질서를 전사회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계급적 지배 질서 자체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민중 민주주의는 민중이 정치 권력을 쥐고, 그 사회의 다수인 민중의 논리에 입각해 제반 정책들을 실시해 나가므로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현재의 파쇼 권력이 다수에 대한 소수의 폭압적 지배 질서, 즉 소수만의 민주주의인데 반해 민중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사회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물론, 민중 민주주의는 소수의 지배 계급의 논리와 근거를 최후까지 척결하여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계급적 지배 질서 자체를 폐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셋째, 민중 민주주의란 정치적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민중 권력을 세움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소수에 의해 독점된 자본·금융 자본 등을 민중 권력이 소유하여 경제적 불평등과 착취 질서를 해소하고 노동이 실질적인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구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독재 권력을 영원히 추방하고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중 권력을 수립하는 것은 모든 민중 운동의 핵심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중 권력만이 한반도의 통일을 책임 있게 주도할 것입니다.

### 3. 민중 권력과 폭력 혁명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민중 권력 쟁취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폭력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민중의 이해와 역사 발전의 대의에 입각해 민중 권력을 세우려는 우리들의 노력을 현 독재 정권이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천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4천만 민중들의 민주 쟁취 열기를 현정권 스스로 인정하고 권좌에서 물러난다면 어떠한 물리력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어디 그렇게 쉽게 발전합니까? 너무도 당연히 임금 좀 올리라는 요구조차도 구사대, 백골단을 투입시키고, 광주 항쟁 당시만 해도 공수 부대에 의해 수천 명의 시민군이 살육당했는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일, 우리 4천만 민중이 여의도 광장에 집결하여 "이제부터 이 나라 정치 권력의 주체는 민중입니다! 독재 정권은 스스로 청와대에서 물러나고 군부 세력은 본연의 군 임무로 복귀하십시오! 국회 의사당은 노동자·농민 등 각 계급·계층의 대표들로 채워질 것이요"라고 극히 평화적으로 선언한다면 현정권은 어찌하겠습니까? 민중의 뜻대로 따를 것 같습니까! 현대 중공업의 파업 투쟁을 육해공군을 동원한 군사 작전으로 초토화시킨 정주영의 말처럼 탱크나 미사일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민중적 대의를 현정권이 무력으로 짓밟아 버리는 한, 우리 스스로 정치적·군사적 무장을 굳건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 필연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민중은 폭력을 증오한 반면 평화를 사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독재자는 폭력을 그들의 지배 수단으로 애호해 왔으며 자신들이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폭력 행사를 다양한 명분으로 포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고도 가증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민중적 대의를 현정권이 무력으로 짓밟아 버리는 한, 우리 스스로 정치적·군사적 무장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정치 쿠데타는 역사적 요청이라 포장하고 부마 항쟁, 광주 항쟁, 6월 항쟁, 7·8월 노동자 대투쟁 등 민중들의 물리력 행사는 폭도라 매도했던 것입니다.

구사대 폭력의 참상을 경험한 노동자나 광주 항쟁의 피어린 살육전을 체험한 시민군이라면 폭력이 인간 세상을 얼마나 유린하고 치떨리게 하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폭력을 철저히 추방하자면서도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폭력 테러 행사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독재 권력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라도 민중 스스로 정치적 힘과 무장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은 뻣속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87년 7·8월 투쟁 당시 파업 투쟁 과정에서 구사대의 폭력, 자본가의 횡포, 독재 경찰의 폭력 진압을 맞본 노동자입니다. 저희들은 폭력 경찰에 연행되면서 왜 우리가 좀더 확실하게 단결하고 투쟁하지 못했ند가를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튼튼히 힘을 길러 무장해야 한다는 것은 현 독재 정권에 대응할 군사력을 비밀리에 양성하고 테러단을 은밀히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역사적 대의가 있고 민중 민주주의란 정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 생산의 주역인 천만 노동자 군대를 중심으로한 4천만 민중이라는 튼튼한 부대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 발전의 대의와 정당성에 입각해 노동자 계급을 위시로 한, 4천만 민중 스스로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강력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꾸려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폭력이나 테러도 서슴지 않는 독재 권력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라도 민중 스스로 정치적 힘과 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 4. 한반도 통일 방안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의 현실은 과거 45~53년에



수행되었던 “반제 반봉건 민중 민주주의 혁명”이 실패한 결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당시의 혁명이 “독립된 민족 통일 국가”의 건설과 일제 때부터 이어져 오던 반봉건 잔재의 완전한 청산이었음에도 조선의 혁명 주체는 혁명을 남북한이 분리시킨 채 진행시켰습니다. 이로써 당시 혁명의 최대의 적인 미제국주의가 남한에 자신의 전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후 미제국주의의 신식민지 전략은 국제적인 경제 수탈적 분업 체제로의 편입 및 대소 방어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과 이러한 역할을 집행할 남한 자체 국가 권력의 물질 기반 형성에 두어짐으로서 남한은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로 자신을 정립시키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미제국주의의 냉전 질서를 창출하는 세계적 차원의 한 고리로서 규정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단 체제의 성격은 조선 혁명의 실패 이후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적대적 국가 체제, 즉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로 정립됨으로써 “체제 대립”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미제국주의의 신식민지 전략의 단순한 강점이 아닌 체제의 격심한 대립을 통하여 관철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반도는 미제국주의의 냉전 질서를 창출하는 세계적 차원의 한 고리로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분단의 성격이 이렇다 할 때, 분단 구조 해소와 극복을 지향하는 통일의 성격과 위상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통일은 과거 실패한 한반도 차원의 혁명을 완수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즉, 단일한 민족 통일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며 그것은 반제 전선의 주체를 한반도에서 단일하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의 신식 전략이 과거와 같이 봉건 잔재에 기초한 것이기보다 자본주의적 반공 질서의 와해에 의한 민중 권력 수립을 전제로 했을 때만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일은 미제국주의의 신식 전략을 완전히 차단하고 민중의 계급적 해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물질 토대의 재편을 수행해야 하며 미제국주의와 잔존 파쇼

세력의 반혁명 책동 분쇄를 위한 남북한 단일의 투쟁 전선 구축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성격의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현단계 통일 투쟁의 원칙은 첫째, 남한 혁명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통일은 체제 대립의 해소와 미제국주의 전략의 분쇄에 있으며, 이는 일차적으로 한반도에서 미제국주의 전략의 거점이 되고 있는 남한의 자본주의적 반공 체제의 와해를 전제로 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한 혁명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제와 파쇼의 기만적 통일 방안이나 체제 대립의 성격을 모호하게 은폐한 채 “민족적 감성”에 의한 통일은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위와 같은 투쟁 과정을 통해서 남한 주체의 민중 권력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로써 남한 민중과 북한 민중은 상호 대등한 차원에서 통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일의 분명한 주체로서 남한 민중을 설정하는 것이며, 남한 민중이 주체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은 실현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평화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통일은 전한반도 차원의 혁명을 완수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남한 혁명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일은 남한 혁명 과정에서 즉자화 되기보다 남한 혁명의 성숙과 완성을 통해 현실화되며, 이때에야 비로소 전조선 차원의 통일이 현실 과제로 대두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남한 민중과 북한 민중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한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차원에서 북한에 의한 무력 통일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평화 통일의 원칙이 남한 혁명의 과정에서 필연화될 수밖에 없는 반제 투쟁, 반파쇼 투쟁 과정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해서 현단계 통일 투쟁의 목표를 얘기해

통일은 남한 혁명을 전제로 하여 남한 민중이 주체가 되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단계의 통일 투쟁은 보겠습니다.

“파쇼 타도  
민중 권력 수립”  
투쟁에 기여해야  
합니다.

통일 투쟁은 통일의 전제요, 통일의 남한 주체 형성 과정인 “파쇼 타도·민중 권력 수립” 투쟁에 기여해야 합니다. 즉 통일 투쟁은 신식민지 전략의 관철 주체인 미제와 독점 자본의 지배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며 이들의 반통일적 집행 권력체인 파쇼 권력의 타도를 주요한 방향으로 합니다. 이러한 통일 투쟁은 파쇼 및 미제의 반통일, 반민중적 물질 기초의 분쇄를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 쟁취 투쟁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즉, 대소 전진 기지로서의 반공 체제 유지를 위한 미제의 주한 미군, 핵무기, 팀스피리트 훈련 폐지 및 철폐와 미제와 파쇼의 호전성에 대응키 위한 북한의 방어적 물리력을 호도하여 냉전·반공 질서를 유지하는 제반 이데올로기 분쇄 및 휴전 협정 폐기, 평화 협정·불가침 협정 체결을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또한 남한내에서 이러한 반공·냉전 질서의 와해를 위한 민중의 투쟁을 가로막는 제반 악법과 폭력 기구의 해체를 통해 파쇼의 반통일 물질 기초를 와해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밖에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한 반민중적 동원 체제로서 예비군, 민방위, 전투 경찰의 해체를 위해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북한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변혁의 지원 역량으로서 북한의 역할이 변혁의 방어기 단계에서는 남한 민중 운동에 유리한 투쟁의 조건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후 변혁의 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화될 반제 전선에서 북한 사회주의 역량은 남한의 변혁 역량을 보위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반혁명 책동의 구체적인 양식은 경제적 봉쇄를 통한 민중 권력의 위기 조성, 사회 혼란을 유도하여 반혁명을 조직하는 양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남북한 민중은 상호 경제적 결합을 통해서 이에 대처할 수 있고 이러한 기초



를 통해 반제 전선을 전일화시켜 남북 민족 통일 전선을 강고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반제 민족 통일 전선은 향후 통일 국가 건설을 급속히 추동해 나가는 사상적·조직적 통일의 토대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면 계급 투쟁을 촉진시키는 조건 확보를 위해서도 북한의 역할은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파쇼 권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그들과 협상과 대화를 하는 문제는 일정한 차이를 갖는 것입니다. 즉, 군사·정치적으로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을 협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강제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파쇼를 대화의 주체로 건인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파쇼의 반통일성을 폭로할 수 있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퇴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와 협정의 주체로부터 파쇼 권력을 배제할 때 북한의 어떠한 노력도 남한 민중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고 오히려 역선전에 이용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남한 변혁 운동과 결합하는 것인가라는 문제는 현 북한 권력의 정치 노선의 변화 여부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즉 현재 국제적인 신데땅뜨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반복 이데올로기의 좋은 먹이가 되고 있고, 70년대 이후 노정된 경제적 취약성은 사회주의 국가의 권위를 올바르게 선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진보성은 착취가 없다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여타 신식민지 민중의 반자본주의적 투쟁과 사상을 고무할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우월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회의 정치 경제적 개혁과 개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북한은 적극적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남한에 대한 혁명적 역할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분단 체제를 와해시키는 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적 조건을 창출할 것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남한 변혁 운동과 결합될 것인지는 현 북한 권력의 정치 노선 변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5. 민중 권력 수립과 의미

민중 권력은 사회 변혁의 과정에서 주요한 이행의 기관이며 이의 물적 토대는 광범위한 계급, 계층이 연합하는 민중의 정치 조직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지도성과 민주주의적 중앙 집중제에 의한 운영 원칙의 관철이 보장되는 전략적 의미의 민중 통일 전선입니다. 민중 통일 전선은 그것의 구축 과정에서 또는 대중 투쟁의 과정에서, 권력 장악의 과정에서, 단적으로 말하면 이행 과정에서 통일 전선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제반의 구체적 실천 방침을 의미합니다. 민중 통일 전선의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규정은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간 계층이 지속적으로 하강 분해되어 노동자 계급과 여타 중간 계급이 거의 동일한 계급적 이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 또한 한편으로는 거의 동일한 기본적 이해(파쇼 권력과 내외 독점 자본의 가혹한 수탈 체제에 대한 반정부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의 차별성에 의해 서로의 존재 양식이 구조적으로 다양화해 가고 있으며 때론 상호간의 이해를 둘러싸고 민중 내적으로 대립의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이상의 양면적인 변혁 세력간의 이해 관계를 목적 의식적인 사회 변혁을 위하여 각 부문, 계층 내부의 자발적 연대를 통일되고 안정적인 단일한 정치 조직으로 결집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당면 민주 변혁의 발전 단계는 주체 형성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의 핵심 과제는 운동의 지도 중심을 올바르게 세우고 더불어 사상 중심의 지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전선 주도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쟁 중심체, 즉 통일 전선체가 앞에서 말한 여러 특수한 조건에 의해 특정 계급 운동의 단일한 발전의 보장과 이를

토대로 민중과의 연합 운동이라는 전술적 의미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중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 민중들의 단일한 전선체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민중 통일 전선은 당면 민주 변혁에서 요구되는 경제적 임무와 정치적 임무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치 투쟁의 중심체이며 지도 중심의 발전된 조직입니다. 혁명적 시기에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중 권력을 조직화하고 장악하며, 모든 반혁명의 기도를 물리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권력 수립 기관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민중 통일 전선은 당면 민중 민주 변혁에서 민중 세력의 권력 획득을 지향하는 투쟁을 현실적으로 조직화시키고 민중 민주주의 이념을 대중화하여 계기적으로 전개되는 투쟁에 통일성과 목적 의식성을 지속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민중 통일 전선은 사회의 이행 과정에서 통일 전선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제반의 구체적 실천 방침을 의미합니다.